

386 세대는 어디로 갔나? :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강원택

서론

2002년의 대선, 2004년의 총선과 비교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특성 중 하나는 소위 '386세대'의 실종이다. 386세대는 노무현 돌풍의 주역이었고 세대 간 격렬한 이념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4-5년 뒤에 실시된 선거에서 386세대는 정치적으로 별다른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2002년 당시 386세대를 상징했던 것은 그들의 강한 이념적 진보성이었다. 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형성된 진보적 이념에 대한 세대적 공감대가 386세대의 정치적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007, 2008년 선거에서 나타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념 요인의 쇠퇴였다. 386세대의 정치적 실종과 함께, 적어도 2002년만큼 강한 이념적 균열의 영향을 선거 기간 중 느끼기는 어려웠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는 2007, 2008년 선거에서 이념의 영향이다. 과연 유권자의 정치 이념은 2007년의 대통령 선거와 2008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얼마나 강한 효과를 가졌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념이 담고 있는 속성이 어

떤 것인지, 일관성 있는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는 386세대의 '정치적 실종'에 대한 것이다. 불과 4-5년 전인 2002년과 2004년 선거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던 이들 세대가 2007, 2008년 선거에서는 왜 두드러진 특성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만약 이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수화'되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2002년의 '386세대'는 그저 연령 효과(age effect)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대 효과를 보여줄 만한 어떤 특성이 2007, 2008년 선거에서도 계속해서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글의 가정이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2007, 2008년의 두 차례 선거의 특성을 2002, 2004년의 두 선거와 비교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폭을 이념과 관련된 요인에 국한하고자 한다. 즉 2007, 2008년 선거에서 개별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 예컨대 지역주의나 노무현 정부의 평가 등 2007, 2008년 선거 기간 중 제기된 다른 변인들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자료는 동아시아 연구원^{EAI}과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여섯 차례 조사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두 차례 조사 등 모두 여덟 차례의 패널 조사 데이터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이념의 영향

한국 선거에서 이념의 영향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대통령 선거 이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가 유권자의 선거 행태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 지지에 대한 이념 변인의 영향이 확인되었다(강원택 2003, 제1장). 특히 이회창, 김대중 두 후보에 대한 지지층의 이념적 성향은 서로 뚜렷이 대조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회창의 경우 보수, 안정 회귀의 계층이, 김대중의 경우 변화, 진보 지향 유권자의 지지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두 후보의 이념적 위치 역시 그들의 지지자들과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국 선거에서 이념의 영향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역시 2002년 대통령 선거부터일 것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규정했던 노무현 후보의 등장과 386세대로 대표되는 진보적 유권자 층의 결속, 여중생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한 대미관계 변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전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추진된 햇볕정책에서 파생된 쟁정치적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격렬한 이념적 갈등이 생겨났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매우 강한 보수적 태도 역시 후보자 간 이념적 차별성이 부각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이념의 영향은 그 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 2002, 2004년 선거에서 이념적 요인이 유권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Kang 2008; Jhee 2006; Lee 2007; 김욱 2006; 조성대 2004; 강원택 2003). 이러한 연구들은 이념적 요인이 선거에 미친 구체적인 효과나 방식에 대해서는 각기 상이한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이념이 우리나라 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07년 대통령 선거와 뒤이은 2008년 총선에서 이념의 영향은 어떠했을까? 과연 이 두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ideological position)나 후보자 혹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의 근접성(proximity of ideological distance)이 후보자나 정당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러한 질문이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것은 2002, 2004년과는 달리 2007, 2008년 선거에서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에 보았던 것과 같은 격렬한 이념적 대립이나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한 쟁점은 2007, 2008년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강원택(2008a)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의 경향이 강했으며, 무엇보다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분석하면서, 민주화 이후 네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권위주의 청산, 정치개혁, 지역주의 타파, 정경유착 해소, 행정개혁, 재벌개혁 등 정치적 이슈가 선거 과정을 주도해 왔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즉 민주화 이후에 실시된 다른 대통령 선거와는 상이한 특성을 보인 선거였다는 것이다. 또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의 정치적 상황의 전개나 이명박 정부의 초기 실책이 일부 유권자의 지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강원택 2008b). 그렇다면 과연 2007, 2008년 선거에서도 이념이 중요한 투표 결정의 요인으로 작용했을까?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념이 후보와 정당 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념적 입장에 대한 태도와, 특정 쟁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시각의 차이 등 두 가지 측정 방식을 모두 고려하였다. 유권자들의 주관적 이념 평가는 자기 자신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명박, 정동영 두 후보 간의 이념적 거리 등 세 가지 변인을 포함했다. 후보자와의 이념 거리에서 설정하고 있는 가정은 다운즈 Downs적인 이념적 근접성 모델이다. 즉 이념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후보에 대한 지지의 확률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념적 갈등의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범주의 변인들을 고려했다. 첫째는 ‘국가 대 시장’의 범주이다. 이는 매우 전통적인 좌우 구분의 기준으로 ‘국가’를 강조하는 쪽이 진보적 입장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한 형평성, 균등을 추구하는 입장이며, 반대로 ‘시장’을 강조하는 쪽이 보수적인 입장으로 효율과 경쟁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이 모델에서는 성

[표1] 이명박-정동영 지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모델

범주	정책	B	Wald	Exp(B)
국가	성장보다 분배 중요	0.47 ¹	20.01	1.60
대	대기업 규제 완화	-0.35 ¹	11.89	0.70
시장	대학 본고사 실시	0.42 ²	5.66	1.52
자유, 권리 대	집회 및 시위 보장	-0.13	1.56	0.88
권위, 질서	여성의무 고용제	0.03	0.07	1.03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0.29 ¹	7.82	1.33
반공	남북정상 회담 평가	1.09 ¹	49.81	2.97
이데올로기	한미동맹 강화	-0.23 ²	4.45	0.79
	대북지원	-0.48 ¹	15.21	0.62
대외 개방	한미 FTA 비준	0.28	3.40	1.32
	대외개방	-0.22	3.38	0.80
주관적 이념	개인 주관적 이념 위치	0.19 ¹	13.30	1.21
	이명박과 이념 거리	-0.15 ¹	10.28	0.86
	정동영과 이념 거리	0.15 ¹	9.10	1.17
	상수	-1.65 ²	4.66	
-2 Log likelihood = 876.7 Cox & Snell R ² = 0.29 percentage correct 80.4				

주1. 종속변인 : 정동영 - 0, 이명박 - 1

주2. 1 - p<0.01, 2 - p<0.05

주3. 여성의무고용제, 집회/시위 보장,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 대기업 규제 완화, 한미동맹 강화, 국가보안법 개정/폐지(1차 조사) : 1 - 매우 찬성, 2 - 대체로 찬성, 3 - 대체로 반대, 4 - 매우 반대
대북 지원(4차 조사) : 1 - 대북지원 전면 중단, 2 - 인도적 지원에 한정, 3 - 현재 수준 유지, 4 - 대북지원 확대
대외개방정책(2차 조사) : 1 -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 확대해야 한다, 2 - 현재 속도로 개방 유지해야 한다, 3 - 현재보다 개방 속도 늦춰야 한다, 4 - 개방정책 축소/폐지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2차 조사, 정상회담 이전) : 1 - 매우 긍정적, 2 - 어느 정도 긍정적, 3 - 다소 부정적, 4 - 매우 부정적
한미 FTA 비준(1차 조사) : 1 - 비준해야 한다, 2 - 체결내용 검토 후 비준여부 결정해야, 3 -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본고사 실시 : 0 - 실시해야 한다, 1 - 실시해서는 안 된다[참조범주]

개인 주관적 이념(6차 조사) : 0 - 가장 진보, 5 - 중도, 10 - 가장 보수

이명박, 정동영 이념거리(6차 조사) : (Σ | 개인 주관적 이념 위치 - 각 후보 주관적 이념 위치 |)/n

장 대 분배, 대기업 규제 완화, 대학 규제와 자율 등 세 가지 변인을 포함했다.

두 번째 범주는 ‘자유, 권리 대 권위, 질서’에 대한 것이다.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와 권위적(authoritarian) 태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소수자 보호를 강조하는 쪽이 진보적 입장이며 전통, 질서, 권위 등을 주장하는 쪽이 보수적 입장이다. 여기서는 여성 우대 정책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 등 두 가지 변인을 포함했다.

세 번째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범주이다. 이는 비교정치적으로 보편적인 보수-진보 구분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는 한국정치에서 이념적 갈등의 역사적 요인 혹은 정치상황적(contextual)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동안 경험적으로 가장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근원이었다. 여기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남북정상 회담에 대한 평가, 대북지원,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 등 네 가지 변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범주는 이전의 연구에서도 자주 거론되었던 구분이다(Kang 2008; Lee 2007).

네 번째 범주는 다소 새로운 것이다. 대외개방과 관련된 시각의 차이이다. 그동안 대외개방 문제는 한국정치에서 그다지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으며, 보수-진보로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한-칠레 FTA, 한미 FTA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경험하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유권자들의 입장도 비교적 이전에 비해 보다 명료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조사 자료에서는 이념적 입장에 따라 대외개방 문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이념적 차이가 확인된다.¹⁾ 대외개방을 주장하는 입장이 보다 보수적이며, 대외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이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

1) 이번 조사에서 대외개방에 대한 태도와 자기 주관 이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t-test 결과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보수적 입장이 개방에 호의적이며, 진보적 입장에 개방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개방 확대해야	개방 축소/조정해야	t - test
평균	5.60	5.23	4.09

주. 0 - 아주 진보, 5 - 중도, 10 - 아주 보수

났다. 이러한 이념적 태도는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지스틱 모델 속에서는 한미 FTA의 국회 인준에 대한 태도와 전반적인 대외개방에 대한 입장 등 두 가지 변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변인에 따른 정치적 선택의 효과가 [표1]과 [표2]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표는 각각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과 정동영 후보의 선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모델,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친박연대의 지지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모델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두 표에서 모두 비교적 매우 일관되고 분명한 이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을 가르는 쟁점 정책 범주 네 가지 가운데 ‘국가 대 시장’과 ‘반공 이데올로기’ 두 범주에 속한 모든 변인에서 투표 결정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 두 범주에 대해서는 여기에 속한 변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반면 ‘자유, 권리 대 권위, 질서’와 같은 사회적 이념의 문제나 ‘대외 개방’의 범주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 대 시장’의 범주를 보면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할수록, 대기업 규제 완화를 찬성할수록, 대학 본고사 부활을 찬성할수록 정동영 후보보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공 이데올로기’ 범주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반대할수록, 남북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할수록 그리고 대북지원에 반대할수록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느 항목을 막론하고 보수적인 응답을 한 유권자는 이명박 후보에게, 진보적인 응답을 한 유권자는 정동영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두 범주의 응답 패턴은 매우 분명하고 일관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념적 패턴은 스스로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평가한 주관적 이념 위치에 대한 인식과 두 후보 간의 이념거리에 대한 인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개인의 주관적 이념 위치

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과 이명박 후보와의 이념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정동영 후보와의 이념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의 결과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적 요인은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매우 뚜렷하고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특히 '국가 대 시장'이나 '반공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쟁점 정책 분야에 대한 이념적 태도는 매우 일관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좌와 우를 가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이념적 범주는 2002년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그다지 강하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Kang 2008, 471-472). 그러나 [표1]의 결과를 통해 2007년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함께 '국가와 시장' 범주가 매우 뚜렷한 이념적 균열의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1]에서 발견한 이념적 일관성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총선에서도 2007년 대선 때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각 변인의 영향이 확인된다. [표2]는 지역구 투표에서 각 정당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친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자의 속성은 네 항목에 걸쳐 매우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택의 경우만큼 이념의 영향이 분명하고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념 범주 네 가지 가운데 [표1]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대 시장', '반공 이데올로기' 두 범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대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에 반대할수록, 남북정상 회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리고 대북지원에 반대할수록 통합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주관적으로 평가한

[표2] 다항 로지스틱 모델 : 총선에서 주요 3당에 대한 투표 결정 요인(지역구)

구분	정당	변인	B	Wald	Exp(B)
한나라당	국가	성장보다 분배 중요	0.29 ²	5.40	1.34
	대	대기업 규제 완화	-0.25 ²	4.23	0.78
	시장	대학 본고사 실시	0.23	1.17	1.26
	자유, 권리	집회 및 시위 보장	-0.006	0.24	0.94
	대권위, 질서	여성의무 고용제	-0.15	1.16	0.86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0.30 ²	6.13	1.35
	반공	남북정상 회담 평가	0.61 ¹	12.72	1.83
	이데올로기	한미동맹 강화	-0.23	3.06	0.79
		대북지원	-0.33 ²	4.01	0.72
	주관적 이념	개인 주관적 이념	0.21 ¹	11.83	1.23
자유선진/친박연대		이명박 이념거리	-0.10	3.14	0.90
		정동영 이념거리	0.04	0.57	1.04
		상수	-1.19	1.70	
	국가	성장보다 분배 중요	0.20	1.28	1.23
	대	대기업 규제 완화	-0.24	1.73	0.79
	시장	대학 본고사 실시	0.43	1.92	1.54
	자유, 권리	집회 및 시위 보장	0.05	0.63	1.05
	대권위, 질서	여성의무 고용제	-0.21	1.03	0.81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0.20	1.43	1.23
	반공	남북정상 회담 평가	-0.13	0.28	0.60
	이데올로기	한미동맹 강화	-0.04	0.03	0.86
		대북지원	-0.37	2.09	0.69
	주관적 이념	개인 주관적 이념 위치	0.23 ²	6.48	1.26
		이명박과 이념거리	-0.13	2.13	0.88
		정동영과 이념거리	0.11	1.75	1.11
		상수	-0.98	0.54	
	-2 Log likelihood = 997.3 $\chi^2=161.8$ (p<0.01) Cox & Snell R ² = 0.23				

주1. 기준범주 : 통합민주당

주2. 각 변인의 설명은 [표1]과 동일

이념적 입장에 대한 차이에서도 다시 확인되는데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느낄수록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한편, 통합민주당과 또 다른 보수정당들인 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의 정당 선택에 대해서는 대다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개인의 주관적 이념 위치의 효과만이 입증되었다. 개인의 주관적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통합민주당보다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 등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1]과 [표2]에서는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각 후보나 정당을 선택할 때 이념적 태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념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쟁점 정책에서 매우 일관되고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주관적으로 평가한 이념 척도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정치 전면에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한 이념적 균열이 '국가와 시장'과 같은 전통적이며 실용적인 문제에까지 확대되면서 한국 선거 정치에 이념적 균열이 '내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 변인의 내재화의 경향을 감안할 때, 향후에 치러질 선거에서도 이념은 한국 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갑윤 외 2008 참조).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균열의 내재화가 '국가와 시장'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게 되었지만 서구에서와 같은 계급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 [표3]에서 보는 것처럼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구 소득별 이념의 차이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서구에서 나타나는 패턴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이념적 입장에 대한 차이는 교육 수준에 따라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특히 대학재학 이상 학력 집단의 경우에 상대적인 진보성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4]는 구체적인 쟁점 정책별 태도 및 자기 이념평가와 가구소득과 교육 간의 상관관계 correlation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교육 변인의 상관관계수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인보다는 교육 변인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4]에서는 가구 소득의 차이 역시 쟁점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는 매우 분명한 이념적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분배와 성장의 항목에서는 교육 변인에서보다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대외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얻지 못한 교육 변인과는 달리 저소득층일수록 거부감이 커지는 뚜렷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 이슈라는 점에서, 정책의 속성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과 같은 '계급적' 요인이 이념적 차별성을 보다 뚜렷하게 만들어 낼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3] 가구소득과 교육별 주관적 이념 평균

변인	구분	평균	n	분산분석
가구 소득	하	6.21	141	F=6.68
	중하	5.62	254	p<0.01
	중	5.52	481	
	중상	5.38	495	
	상	5.33	71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96	179	F=23.95
	고졸	5.80	661	p<0.01
	대재 이상	5.24	1271	

주1. 이념 : 0 - 가장 진보적, 5 - 중도, 10 - 가장 보수적
 가구소득: 하(99만원), 중하(100-199만원), 중(200-299만원), 중상(300-399만원), 상(400만원+)

이념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각 후보별 지지자의 이념적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5]는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후보와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의 이념 평균은 그 이전의 대선과 총선에서의 각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자의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지지자들의 이념 평균을 보면 이전 선거와 2007, 2008년 선거 간에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보면, 이회창 지지자들에 비해 이명박 지지자들의 이념 평균

[표4] 각 쟁점 정책과 가구소득, 교육수준 간의 상관관계

정책	여성의무 고용	집회 및 시위 자유	분배 중시	대기업 규제 완화	한미 동맹 강화	국가보안법 개폐
가구 소득	0.09 ¹	0.01	0.13 ¹	0.04 ²	0.08 ¹	-0.03
교육	0.10 ¹	-0.03	0.10 ¹	0.12 ¹	0.16 ¹	-0.08 ¹
정책	대북 지원 축소/조정	본고사 실시	대외개방 확대	남북정상 회담 평가	한미 FAT 인준	주관적 이념 평가
가구 소득	0.00	0.06 ¹	-0.05 ¹	-0.03	-0.03	-0.10 ¹
교육	0.04	0.14 ¹	0.00	-0.07 ¹	0.01	-0.13 ¹

주. 1 - p<0.01; 2 - p<0.05

이 중도 쪽으로 가까워진 반면, 정동영 지지자들의 이념 평균은 노무현 지지자들에 비해 오히려 진보 쪽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총선에서도 2004년 총선에 비해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이념 평균은 중도 쪽으로 이동한 반면, 통합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우리당(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보다 진보적 성향이 강해졌다. 즉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지지

층의 이념적 범위는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 넓어진 반면, 정동영 후보와 통합민주당에 대한 이념적 지지 기반은 진보적 이념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으로 제한되어 협소해진 것이다. 2007, 2008년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승리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짐작하게 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5] 투표한 후보와 정당별 유권자의 이념 성향

선거	후보자/정당 지지자의 이념 평균				분산분석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회창 6.23	노무현 4.84			t=5.27 p<0.01
2007년 대통령 선거	이명박 5.97	정동영 4.61	이회창 6.22	문국현 4.36	F=85.87 p<0.01
2004년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6.23	열린우리당 4.84	민주당 4.99	민주노동당 4.66	F=82.28 p<0.01
2008년 총선 (지역구)	한나라당 6.02	통합민주당 4.65	자유선진/친박 5.97	진보신당/민노 4.95	F=32.04 p<0.01
2008년 총선 (정당투표)	한나라당 5.91	통합민주당 4.74	자유선진/친박 5.97	진보신당/민노 4.95	F=40.56 p<0.01

주1. 0 - 가장 진보, 5 - 중도, 10 - 가장 보수

주2. 개인 이념 - 6차 조사 자료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자료 - 1차 조사 자료

2007년 대선 - 6차 조사 자료

2008년 총선 - 8차(총선 2차) 자료

세대와 이념 : 386세대는 어디로 갔나?

앞 절에서 본대로 2007, 2008년 선거에서 이념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2002, 2004년 선거에서의 특이했던 점은 이념과 세대가 결합된 특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386세대'는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진보적인 이념과 386이라는 세대 집단이 상호 결합하였고 이는 다시 20대 유권자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이념적 진보성은 그들보다 연장자 세대의 보수적인 이념과 갈등을 빚었으며 정치적 지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Kang 2008, 466-467). 2002년의 이러한 특성은 [표6]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²⁾.

[표6]을 보면, 1970년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노무현에 대한 지지가 61.2%로 가장 높았고, 386세대의 노무현 지지가 58.8%로 큰 차이 없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집단의 노무현 지지의 비율은 386 이전 출생 세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합쳐 진보적 후보에 대한 지지의 비율은 386 이후 출생한 세대의 경우 64.3%, 386세대는 61.2%로 나타나, 이념적으로 본다면 진보적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노무현 지지 비율이 42.1%, 권영길에 대한 지지율은 1.1%인 386 이전 출생 세대와 비교하면 거의 20%에 가까운 큰 투표 성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386세대만을 두고 볼 때 2002년 대선에서 이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 보낸 모습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앞에서 본대로 2007, 2008년 선거에서도 이념적 태도는 정치적 지지의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2, 2004년과는 달리 386 세대는

2) 386 세대는 2007, 2008년 선거 당시에는 대다수가 40대로 접어들었지만, 386 세대가 기본적으로 60년대 출생자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출생 연대를 기초로 세대를 분류하였다.

[표6]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세대별 투표 행태

	386 이후 세대 (2002년 투표자에 한정*)	386 세대 (60년대 생)	386 이전 세대 (59년 이전 출생 세대)
이회창	25.5	32.9	52.9
노무현	61.2	58.8	42.1
권영길	3.1	3.3	1.1
기타	0.9	1.1	1.7
기권	9.3	3.9	2.2
합계 (n)	100.0 (1123)	100.0 (794)	100.0 (1271)

* 1980년대 출생자 가운데 2002년 투표권이 없는 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 1차 조사자료

2007, 2008년 선거에서는 정치적으로 '실종'되었다. 불과 4~5년 전에 정치적 진보를 상징하던 집단인 386세대는 2007, 2008년 선거에서는 거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정치세대로서의 집단적인 정치적 정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2007, 2008년 선거에서 386세대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이며 왜 그러한 변화가 생겨났을까?

[표7]는 2007, 2008년 선거에서 386세대를 기준으로 각 세대 집단의 투표 성향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의 분석을 보면 세대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지만, 동시에 앞의 [표6]과 비교할 때 2002년과도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2007년 대선에서 386세대의 57.2%는 보수 후보인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으며, 그 절반도 안 되는 24.5%만이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명박 후보보다 보수적으로 평가 받았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386 세대의 비율도 11.6%에 달했다. 이명박 · 이회창 두 후보에 대한 386세대의 지지의 비율을 합하면 모두 68.8%에 달한다. 5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386세

대의 61.2%가 노무현·권영길 등 진보적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지지의 이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86 이후 출생 세대의 58.7%, 386 이전 출생 세대의 77%가 보수 성향의 두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보수 후보들의 뚜렷한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02년에는 386세대가 20대 유권자들과 유사한 투표 행태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386세대는 그들보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선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386 이후 출생 세대와 386세대가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에서는 대체로 비슷한(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386 이후 출생 세대에서 문국현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386세대와 386 이후 출생 세대 간의 정치적 선택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투표에서도 386세대의 다수는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대선과 비교할 때는 진보 정당군에 대한 386세대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는 보수적인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에 대한 386세대의 투표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구 투표에 비해 정당 투표에서 진보 정당 군에 대한 투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386 이후 출생 세대의 투표 행태와 비교할 때, 386세대의 투표 행태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7]의 결과는 2002, 2004년과 2007, 2008년에 386세대의 정치적 선택이 크게 달라졌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386세대 가운데서도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2007년에는 과연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아마도 이들에 대한 지지 이전의 분석이 386세대의 정치적 선택이 변화되었음을 보다 분명하게 입증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386세대만을 대상으로 2002년 노무현과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표7]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세대별 투표 행태

		386 이후 출생 세대	386 세대	386 이전 출생 세대	chi- square
2007년 대선	이명박	46.0	57.2	66.8	$\chi^2 = 102.0$ $p < 0.01$
	정동영	25.3	24.5	19.9	
	이회창	12.7	11.6	10.2	
	문국현	16.0	6.8	3.2	
	합계(n)	100.0(676)	100.0(458)	100.0(725)	
2008년 총선 (지역구)	한나라당	39.3	51.1	59.8	$\chi^2 = 39.9$ $p < 0.01$
	진보 정당군 *	51.2	40.6	27.9	
	선진/친박	9.5	8.2	12.3	
	합계(n)	100.0(285)	100.0(219)	100.0(391)	
2008년 총선 (정당투표)	한나라당	29.1	39.9	45.7	$\chi^2 = 58.4$ $p < 0.01$
	진보 정당군 *	59.2	37.8	31.4	
	선진/친박	11.7	22.3	22.9	
	합계(n)	100.0(299)	100.0(238)	100.0(411)	

* 진보 정당군 :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누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8]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돌풍의 주역이 386세대였지만, 2007년 대선에서는 노무현을 지지했던 386세대 가운데 다수가 정동영 후보가 아니라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무현 투표자 가운데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의 비율은 39.2%에 불과한 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이보다 높은 43.4%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회창을 지지한 8.4%를 합치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을 지지한 386세대 유권자 가운데 50% 이상이 '보수 정당의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을 선택한 '보수적인' 386세대 유권자의 압도적

[표8] 386세대의 투표 선택의 변화

2004년 투표 후보	노무현	이회창	
2007년	이명박	43.4	82.2
대통령 선거	정동영	39.2	0
	이회창	8.4	14.9
	문국현	9.0	3.0
	합계(n)	100.0(166)	100.0(101)
2008년 총선	한나라당	38.4	75.6
(지역구)	진보 정당군	60.3	13.3
	자유선진당/친박연대	1.4	11.1
	합계(n)	100.0(73)	100.0(45)
2008년 총선	한나라당	29.5	64.0
(정당투표)	진보 정당군	59.0	2.0
	자유선진당/친박연대	11.5	34.0
	합계(n)	100.0(78)	100.0(50)

다수인 82.2%는 이명박을, 그리고 15% 정도는 이회창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2002년 이회창 지지로부터 이탈한 386 유권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지지 386의 이탈 비율은 다소 줄어들지만 그 패턴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와 대체로 유사하다. 2002년 노무현을 지지한 386 유권자의 60%는 진보 정당군을 지역구에서나 정당 투표에서 선택한 반면, 약 40% 가량은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 친박연대와 같은 보수 정당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86세대 중 2002년 이회창 지지자는 거의 전부가 한나라당 혹은 기타 보수 정당의 지지로 이어졌다. [표8]의 결과는 노무현 돌풍을 지원한 386 유권자의 다수가 그 지지로부터 이탈하였으며, 386세대의 정치적 선택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386세대를 규정지었던 것은 이들 세대의 강한 진보적 이념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무현 후보가 “반미가 뭐가 나쁘냐”라고 말했을 때 열광했고, 국가보안법이나 대북 관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매우 진보적인 특성을 보였다. ‘노사모’라는 전례 없는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인 정치인의 팬클럽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지원했던 이들의 다수도 386세대였다. 그러나 불과 4~5년 사이에 386세대 가운데 다수는 [표7], [표8]에서 본대로 ‘보수 정당’ 후보인 이명박을

[표9] 출생 연대별 이념 평균과 주요 후보와의 이념 거리

	자기 이념 평균	이명박과의 이념거리 평균	부등호	정동영과의 이념거리 평균
1980년대 출생	5.07	1.93	>	1.68
1970년대 출생	4.95	1.97	>	1.73
1960년대 출생	5.45	1.81	<	1.90
1950년대 출생	5.79	1.69	<	2.27
1940년 +이전 출생	6.26	1.82	<	3.12

자료 : 6차 조사

주1. 이념 : 0 - 가장 진보, 5 - 중도, 10 - 가장 보수

선택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386세대의 주된 정치적 특성이 이념적인 진보성에 있다면 386세대의 정치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이념적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표9]는 출생 연대별로 구분한 각 연령 집단의 자기 이념 평균과, 각 유권자가 느끼는 이명박-정동영 두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의 평균을 분

석한 것이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2002년과 같은 386세대의 이념적 특이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386세대는 그들보다 젊은 1970~1980년대 출생 집단과 비교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386세대보다 이전에 출생한 집단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이 확인되지만 과거 보았던 것과 같은 386의 '특출한' 이념적 진보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386세대의 이념적 위치는 그들보다 젊은 세대와 연로한 세대 사이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집단은 1970년대 출생자들이었으며 이들은 그들보다 젊은 세대인 1980년대 출생자보다 오히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유권자들이 30대 유권자들보다 대체로 더 보수적이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명박, 정동영 두 후보와의 주관적인 이념 거리(ideological distance)의 평균값과 관련된 것으로, 386세대는 이념적 거리에서 정동영 후보보다 이명박 후보에 더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86세대보다 젊은 1970~1980년대에 출생한 유권자 집단에서는 이명박 후보보다 정동영 후보에 이념적으로 보다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는 달리 386세대는 그들보다 젊은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연장자 세대들과 함께 '보수적인' 이명박 후보에게 보다 큰 이념적 유사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2007년 대선에서 노무현 지지자의 이탈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표9]에서의 결과는 주관적 이념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이번에는 앞의 [표 1], [표2]에서 본 것과 같이 '국가 대 시장', '자유, 인권 대 질서, 권위', '반공 이데올로기', '대외 개방' 등 이념의 네 가지 범주에 포함된 구체적인 쟁점 이슈에 따른 세대별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10]은 386세대의 이념적 입장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386세대의 쟁점 정책에 대한 입장은 386 이전 출생 세대와 이후 출생 세대의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표9]의 주관적

[표10] 구체적인 쟁점 정책에 대한 세대별 태도

범주	정책	태도	386 이후 출생 세대	386세대	386 이전 출생	교차분석
국가 대 시장	성장보다 분배 중요	찬성	60.6	59.1	62.1	$\chi^2=1.9$
		반대	39.4	40.9	37.9	$p = 0.38$
		n	1402	789	1233	
	대기업 규제 완화	찬성	65.5	71.9	81.4	$\chi^2=84.6$
		반대	34.5	28.1	81.6	$p < 0.01$
		n	1402	782	1234	
자유, 권리 대 권위, 질서	대학 본고사 자율 실시	찬성	47.8	55.9	78.9	$\chi^2=203.0$
		반대	52.2	44.1	21.1	$p < 0.01$
		n	984	642	912	
	집회 및 시위 보장	찬성	66.1	64.3	51.7	$\chi^2=63.4$
		반대	33.9	35.7	48.2	$p < 0.01$
		n	1407	795	1247	
반공 이데올로기	여성의무 고용제	찬성	75.0	76.2	82.2	$\chi^2=21.8$
		반대	25.0	23.8	17.8	$p < 0.01$
		n	1411	797	1273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찬성	69.4	67.5	54.1	$\chi^2=72.5$
		반대	30.6	32.5	45.9	$p < 0.01$
		n	1388	785	1218	
	남북정상 회담 평가	긍정	75.1	73.4	60.6	$\chi^2=59.9$
		부정	24.9	26.6	39.4	$p < 0.01$
		n	1149	674	1021	
대외 개방	한미동맹 강화	찬성	51.4	64.1	82.4	$\chi^2=279.4p$
		반대	48.6	35.9	17.6	< 0.01
		n	1408	790	1228	
	대북지원	찬성	40.1	30.8	27.1	$\chi^2=36.1$
		반대	59.9	69.2	72.9	$p < 0.01$
		n	944	578	851	
	한미 FTA 비준	비준	25.9	41.1	52.4	$\chi^2=183.6$
		비준반대*	74.1	58.9	47.6	$p < 0.01$
		n	1332	773	1144	
대외개방	대외개방	개방	60.1	64.1	70.9	$\chi^2=27.8$
		축소/조정	39.9	35.9	29.1	$p < 0.01$
		n	1159	676	1011	

* 비준반대는 '검토 후 결정해야'와 '비준 반대'를 모두 포함한 값임

이념 평가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국가 대 시장'과 '대외 개방'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는 386세대가 보수화되었지만 386 이전 세대와 유사한 정도의 강한 보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표10]에서는 386세대의 이념적 태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386세대는 11가지 쟁점 사안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386 이후에 출생한 젊은 세대와 대체로 유사한 비율의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386 이전 출생 세대와는 12~17% 정도의 뚜렷한 응답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이슈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것이기도 하며, 세대 간 갈등을 야기했던 주요 정책들이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 이슈는 80년대 대학가 학생운동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386세대를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모습은 386세대가 이와 같은 이념적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 진보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10]에서는 동시에 '실질적인' 사안에 있어서 386세대가 보수화되는 특성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대북 지원에 대한 386세대의 응답 패턴은 보다 젊은 집단과 연장자 집단의 중간 정도에 놓이기는 하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 70-80년대 출생자 집단과는 대북 지원 문제에 있어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386 이전 세대와의 차이는 3.7%로 오히려 그 격차가 작았다. 앞서 지적한 대로, 386세대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쟁점, 즉 국가보안법이나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386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10]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386세대의 이념적인 진보성,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나 집회 및 시위 등에 대한 진보적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북 지원'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입장 간의 괴리 혹은 이중적인 태도가 존재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번에는 '실질적 문제'에 대한 386세대의 관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2007년 대선에서 세대별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정책 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11]에서 보듯이, 세대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은 고용 문제였으며, 그 뒤로 부동산과 교육 문제가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이슈가 전체 응답의 63.5%를 차지했으며, 대북 관련, 대미 관계와 같은 '정치 이슈'는 유권자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 세대

[표11]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가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

중요 정책	출생 연대별 세대 구분					평균
	8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	40년대 -	
교육	13.0	20.5	27.1	12.9	15.2	18.7
부동산	19.8	20.6	21.2	22.8	19.9	20.9
대북관련	4.0	2.4	3.8	5.8	8.4	4.7
연금개혁	9.1	6.1	7.3	9.1	7.0	7.5
대미관계	2.0	1.2	1.6	2.9	4.8	2.4
고용	33.4	23.9	22.3	25.2	21.9	24.8
조세	6.8	7.6	6.7	7.7	5.2	6.8
금융	6.2	9.3	4.7	6.7	7.5	6.9
보건의료	5.4	5.9	3.6	4.1	6.1	5.0
기타/모름	0.3	2.6	1.7	2.8	4.0	2.3
합계 (n)	100.0 (353)	100.0 (591)	100.0 (579)	100.0 (417)	100.0 (441)	100.0 (2382)

별 관심사를 보면, 역시 20대 유권자들인 1980년대 출생자 집단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용 문제로 나타났다. 그 응답 비율이 33.4%로 그 세대 내의 응답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세대의 응답에 비해서도 거의 10% 이상 높았다. 20대 자녀가 많은 1950년대 출생자 집단에서도 고용 문제가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한편, 386세대에 가장 중요한 관심은 교육정책으로 27.1%로 이 응답 역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도 높았고 60년대 출생 집단 내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이었다. 이런 결과는 이들 세대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고용 정책, 부동산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크게 부각되었던 대미관계나 대북정책에 대한 386세대의 관심은 각각 3.8%, 1.6%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386세대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보인 정책 분야는 실용적인 생활의 문제이며 2002년처럼 세대 간 이념적 갈등을 불렀던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즉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념적 요인이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못했으며, 고용, 교육, 부동산과 같은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표12]는 총선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가 제시한 지역 개발 공약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응답의 패턴을 세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12]의 결과는 지역개발 공약이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 개발에 대한 영향은 흥미롭게도 가장 젊은 1980년대 출생 집단에서 가장 높은 41.3%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60-70년대 출생 집단과는 달리 이념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갖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표9]에서 본대로 20대 유권자 집단은 30대 유권자 집단보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이었다. 한편, 지역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았다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은 386 세대에서 나타났는데 39.6%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 부동산에 대한 큰 관심이나 대북 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386세대가 2007, 2008년 선거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질적 이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에서 386세대를 규정한 것은 정치적, 이념적 요인이었다.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인한 대미관계의 변화, 대북관계, 국가보안법 등 첨예한 이념적 갈등을 불러 온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386 세대의 진보성 역시 두드러졌다. 그러나 2007, 2008년 선거에서는 앞의 [표11]에서 보았듯이, 남북관계, 대미관계 등의 이슈는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정치개혁이나 국민통합과 같은 이슈 역시 주목 받지 못했다. 부동산, 교육, 지역 개발, 고용 등 실질적인 경제 관련 생활 이슈가 2007, 2008년의 선거를 지배했던 사안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386세대의 진보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진보성이 드러날 만한 쟁점 사안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만한 이념적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2007, 2008년 선거에서 386세대가 사라져 버린 중요한 요인이었다.

[표12] 2008년 총선 투표 결정에서 지역개발 공약에 대한 영향

	큰 영향 받음	대체로 영향 받음	그다지 영향 받지 않음	전혀 영향 받 지 않음	n
1980년대 출생	7.3	34.0	42.7	16.0	150
1970년대 출생	6.3	27.3	50.9	15.5	271
1960년대 출생	6.0	33.6	47.2	13.2	265
1950년대 출생	6.0	28.8	50.7	14.4	215
1940년대 및 그 이전 출생	7.8	30.3	50.2	11.7	231

결론

2007, 2008년 선거는 2002, 2004년의 선거와 비교할 때 이념적 갈등은 그다지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대로 이념은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보수와 진보 중 유권자의 이념적 입장에 따라 매우 뚜렷하면서도 일관된 투표 선택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전 선거와 비교할 때 ‘국가 대 시장’과 같이 전통적으로 좌-우를 가르는 정책 이슈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이념적 균열은 단지 국가보안법이나 대미 관계, 대북 관계 등 반공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우리 사회에 ‘내재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이념적 차별성이 유럽 정치에서 보는 것처럼 계급정치적 속성으로까지 진전된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본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계층별로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추상적인 가치이자 세계관을 둘러싼 갈등이라면, 국가 대 시장의 이념 갈등은 생활의 문제에 깊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이념적 갈등은 이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적 균열 구조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였던 386세대가 2007, 2008년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실종된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들 세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보수화된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386세대’의 이념적 진보성이 당시 30대가 대다수였던 이들의 연령에서 비롯된 연령효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집회 및 시위 등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특정 쟁점 정책

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들의 진보적인 성향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386세대가 그 밖의 많은 사회적 안전에 대한 시각이 보수화되었다고 하더라도 386 이전 출생 세대의 시각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07, 2008년 선거에서 이들 세대의 진보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 쟁점이 이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만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인 이슈보다 부동산, 교육, 고용 등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슈가 선거 운동을 지배해 온 상황에서 386세대가 중시하는 진보적인 가치의 문제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향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첨예한 ‘정치적인’ 이슈가 부상하게 된다면 386세대의 상당수는 다시 그들의 이념적 진보성으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08a.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 연구〉 14권, pp.29-56.
- 강원택. 2008b.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지지 변화: 누가 왜 바꿨나.” 〈한국과 국제정치〉 24권 3호, pp. 1-28.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김 욱. 2006.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 16대 대통령 선거와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pp. 75-108. 오름
- 박찬욱, 김경미, 이승민.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 정향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박찬욱 편.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 생각의 나무.
- 이갑윤, 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 정치연구〉 1권 1호, pp. 137-166.
- 조성대. 2004. “4.15 총선과 한국 정치의 갈등 구조: 지역주의와 갈등의 대체.” 〈의정 연구〉18권 2호.
- Jhee, Byong-Kuen. 2006. “Ideology and Voter Choice in Korea: An Empirical Test of the Viability of Three Ideological Voting Model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0, No.4, pp. 61-83.
- Kang, Won-Taek. 2008. “How Ideology Divides Generations: The 2002 and 2004 South Korean Election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2, pp. 461-480.
- Lee, Hyun-Chool. 2007. “The ideological disposition of Korean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37, No.4, pp. 472-494.